

건설동향브리핑

제477호 (2014. 9. 15)

■ 경제 동향

- 8월 CBSI, 전월 대비 2.5p 상승한 80.2

■ 정책 · 경영

- 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 산업 발전 방안
- 9.1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 정보 마당

- 2013년 세계 225대 설계기업의 매출 동향 분석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디지털 시대의 생존 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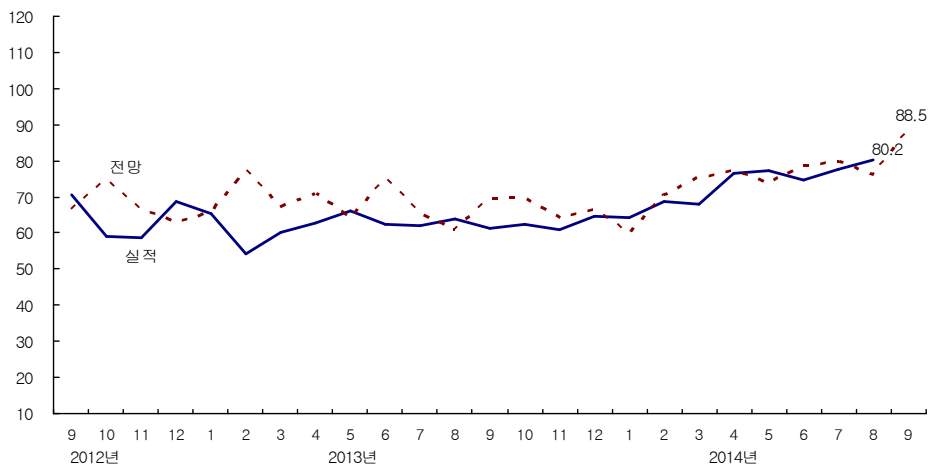
8월 CBSI, 전월 대비 2.5p 상승한 80.2

- 2개월 연속 상승,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 새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 긍정적 영향, 2개월 연속 상승

- 2014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¹⁾는 전월 대비 2.5p 상승한 80.2를 기록함.
 - CBSI는 지난 7월에 전월 대비 3.2p 상승해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8월 들어서도 전월 대비 2.5p 상승해 2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함.
 - 8월의 80.2는 2009년 12월의 82.5 이후, 56개월 만에 80선을 상회하는 수치이자 최고치임.
 - 통상 7, 8월에는 혹서기인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2개월 연속 상승함.
 - 이는 지난 7월에 발표된 주택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새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최근 주택 거래, 주택 분양 및 착공 등의 지표가 호전되며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또한,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주택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며,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단,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 침체 수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쳐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대형기업 지수 하락,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지수 상승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기업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중견 및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함.
 - 대형기업 지수는 지난 7월에 전월 대비 7.7p 상승해 새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201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회복했음. 그러나, 8월에는 전월 상승에 대한 통계적 반락의 효과로 다시 전월 대비 7.7p 하락한 92.3을 기록
 - 중견기업 지수는 지난 7월에 소폭(2.5p) 상승했는데, 8월 들어서도 전월 대비 7.5p 상승한 83.3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했으며, 그 결과 2009년 11월(88.5 기록)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
 - 중소기업 지수는 지난 7월에 전월 대비 1.3p 하락했으나, 8월 들어서는 전월 대비 8.7p 상승해 62.5를 기록함. 이로써 지난 5월에 62.5를 기록해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60선을 상회했던 것과 동일한 수치를 회복함.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3년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62.3	60.9	64.5	64.3	68.9	67.9	76.5	77.2	74.5	77.7	80.2	76.1	88.5	
규모 별	대형	84.6	85.7	92.9	78.6	84.6	84.6	92.3	92.9	92.3	100.0	92.3	100.0	100.0
	중견	51.9	60.7	50.0	67.9	66.7	60.7	75.9	74.1	73.3	75.8	83.3	72.7	93.3
	중소	48.1	32.0	47.9	43.4	52.9	56.6	58.8	62.5	55.1	53.8	62.5	52.0	69.6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9월 전망치, 8월 실적치 대비 8.3p 높은 88.5 기록

- 9월 전망치는 8월 실적치 대비 8.3p 높은 88.5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9월에도 건설 경기의 침체 수준이 8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9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올 9월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9월 CBSI는 「주택법」(분양가상한제 개선), 「소득세법」(주택 임대 소득 개선)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입법화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 산업 발전 방안¹⁾

-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 안전 대진단 실시, 학교 시설 등 안전 투자 예산 확대 -

■ 제안의 배경

- ‘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 산업 발전 방안’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모색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안전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기에서 마련됨.
- 최근 잇따른 대형 안전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 사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졌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 중심의 선제적 재난 안전 관리 체계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
-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2014. 8. 12)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7.2%가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이번에 제안된 안전 산업 발전 방안은 지난 7월 24일에 발표된 경제 정책 방향 중의 ‘대규모 안전 점검 및 안전 투자 확대 방침²⁾과도 연계되어 있음.

■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의 실시

- 안전 산업 발전 방안에서는, 먼저 전 국민의 참여하에 사회 전 영역의 안전 상태를 다양한 관점과 단계에서 점검·진단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의 실시를 제안
- 시설별(교량, 건축물, 교통 수단 등), 대상별(시설/수단별 종사자,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상황별(화재, 재해, 재난 등) 등으로 분류하고 망(Matrix) 방식의 점검·진단을 실시
- 기존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앱(소방방재청의 ‘안전디딤돌’, 안전행정부의 ‘생활불편신고’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일상 생활 속의 위험 요소를 신고·제보하는 체계를 마련
- 민·관 합동 국민안전점검단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중심으로 신고·제보된 정보

1) 본고는 2014년 8월 26일 대통령(의장)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2) ① 모든 민간 시설, 공공 기관 관리 시설, 국가·지자체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잠정적으로 27만 1,000여 개[시설물 3만 8,000여 개, 건축물 23만 3,000여 개])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추진, ② 향후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 ③ 민자 또는 재정으로 건설된 기존 노후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해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으로 보수·보강하는 방안 마련 등

를 분석·평가하고, 관련 지자체 및 기관에게 현장 조사, 보수·보강 실시와 관련 예산 및 법령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

- 또한,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의 결과를 지속 가능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의 ‘안전 진단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 및 운영할 것을 제안
 - 이는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대진단을 상시화하고, 지역별·분야별로 운영해 온 기존의 안전 진단 체계를 상호 연계 및 통합하기 위한 것임.
 - 안전 진단 통합 시스템은 국민 신고·제보를 바탕으로 빅 데이터(Big Data)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개·공유하며, 데이터의 분석 결과에 따른 실제 조치, 결과 보고 등 처리 결과가 국민에게 환류되도록 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임.

■ 안전 산업 육성을 위한 5대 과제

- 국내 안전 산업의 취약점과 공공 수요의 중요성, ICT와의 융합화 추세 등 안전 산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5대 과제를 제시함.
 - 5대 과제는 △ 선도적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의 유도, △ 글로벌 기준에 맞는 안전 기준의 조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안전 관련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의 확대와 전문 인력의 양성, △ 신산업화와 해외 진출 지원 및 대·중소, 민·관 파트너십의 강화, △ 의무 보험의 확대와 민간 금융 상품(재난 보험)의 도입 등임.
- 안전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안전 대진단 결과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되, 학교 등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에 우선적으로 정부 투자를 집중할 것임.
 - 국민 설문조사 결과, 75.4%가 ‘학교 시설’에 최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기존 시설은 RTO/RTL, 신규 시설은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등의 민간 투자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우수 저장 시설 및 사방 설비 등 방재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의 허용을 검토
- 안전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30조원 이상, 안전 대진단 및 안전 산업의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17만 명으로 예상됨.
 - 2013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0.4%(6.7조원) 수준인 국내 안전 산업 시장은 2017년에는 GDP 대비 1%(17.4조원)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이영환(연구위원 · yhleec@cerik.re.kr)

9.1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 과거 시장 과열기의 규제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도모, 국회 계류 법안 조속 처리 급선무 -

■ 발표 배경

- 국내 주택시장은 주택 수요가 신규 분양시장과 전세시장에만 편중되는 등 기형적 왜곡 현상이 지속되면서 신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나 전·월세 간 수급 불일치, 전세 가격의 고공 행진 등에 따른 서민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의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으로, 지난 9월 1일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9.1 대책)’을 확정·발표함.

■ 대책의 주요 내용

- 과도한 개발 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한 재건축 연한의 완화 등 규제를 합리화하여 입주 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함.
 -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현재 서울시는 최장 40년)
 -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합리화하여 연한 도래 후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주거 환경 평가의 비중을 강화(예: 15% → 40%)
 - 재건축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85㎡ 이하 의무 건설(세대 수 60% 이상, 연면적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의 폐지,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중 연면적 기준의 폐지와 세대 수 기준의 5%p 완화
 -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도 시공사의 선택 허용
- 청약가점제를 지자체의 자율 운영으로 전환하는 등 신규 주택의 구매 기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약 통장의 일원화 등 복잡한 청약 제도를 간소화함.
 -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 여건에 맞춰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

- 민영주택의 가점제는 2주택 이상의 보유자에 대한 감점(1호당 10점) 폐지
- 1, 2순위로 구분되어 있는 청약 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을 완화하여 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청약 허용
- 보금자리주택의 전매 제한 완화 등 과도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 등을 통하여 수도권 외곽의 과도한 공급을 조정함.
 - 개발 제한 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완화(2~8년 → 1~5년) 및 거주 의무의 완화(1~5년 → 0~3년)
 -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LH공사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
 - 사업 계획의 승인 이후 착공 의무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공공주택 및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 등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서민 주거의 안정을 강화하며, 임대 리츠나 준공공 임대 등 임대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함.
- ‘유한 책임 대출(비소구대출, Non-Recourse Loan)’을 도입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3억원 → 4억원, 기타 2억원 → 3억원)하며, 근로자 서민 전세 자금 대출 기준을 상향함(부부 합산 5,000만원 → 6,000만원 이내).

■ 향후 전망과 보완 사항

-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의 개선으로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면, 전세시장의 안정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환경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시장 내의 불신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나아가 국내 경기 회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신축 운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 등 국회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함.

두성규(연구위원 · skdoo@cerik.re.kr)

2013년 세계 225대 설계기업의 매출 동향 분석¹⁾

- 세계 설계시장의 매출 성장세 급격히 둔화 -

■ 2013년 세계 225대 설계기업 전체 매출, 전년 대비 1.3% 증가한 1,440억 달러

- 지난 7월 말, 미국의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s Records)지가 발표한 ‘2013년 세계 225대 설계기업(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자료에 따르면, 세계 설계시장의 매출²⁾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설계시장의 매출(국내 및 해외)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1.5%와 8.9%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8억 달러가 늘어난 1.3% 증가에 그침.
 -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0.2% 하락한 717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49.8%를 차지했는데 2011년에 50%를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50% 이하로 다시 하락함.
 - 반면, 국내 매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723억 달러를 기록해 2009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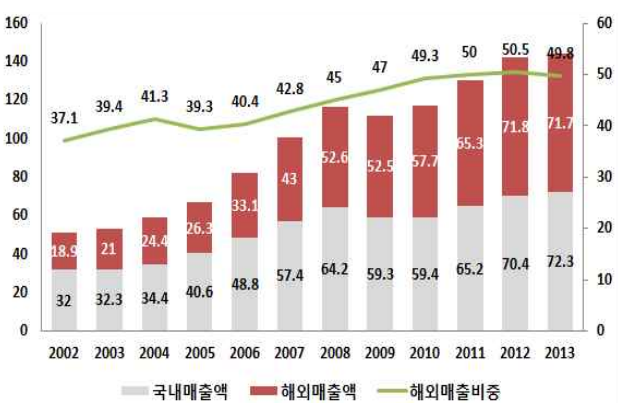
<세계 설계시장 매출 및 성장률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세계 설계시장 국내 및 해외 매출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지역별 : 유럽·중동시장 해외 매출 상승세 지속, 공종별 : 건축·교통 부문이 상승세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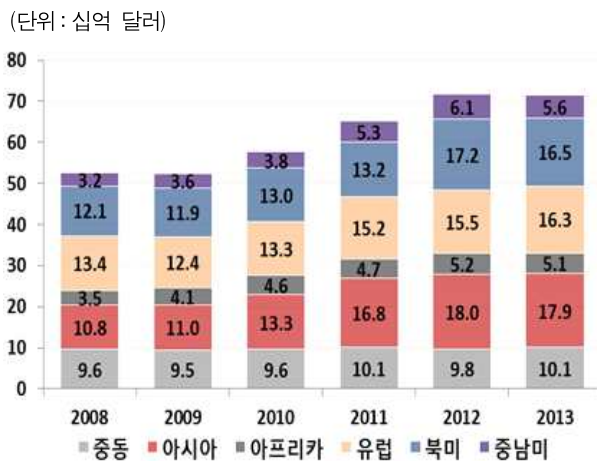
-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과 중동시장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북미와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는 감소하였음.

1) 본고는 *ENR*지가 매년 7월에 발표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ENR*지는 국내와 해외 매출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설 관련 각 부문의 세계 225대 기업들을 소개하고, 지역 및 공종별 매출 규모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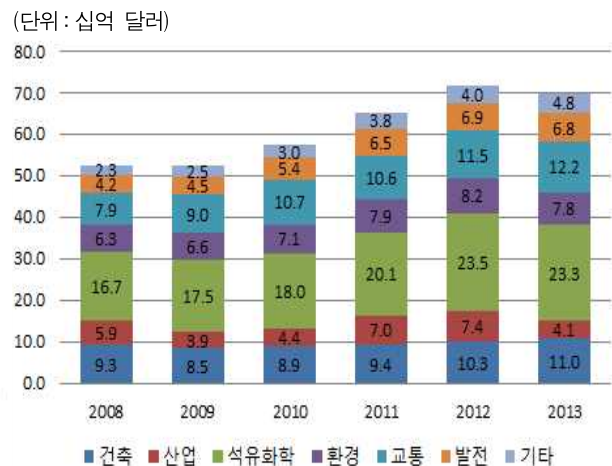
2) *ENR*지 선정 세계 225대 설계기업의 국내 및 해외 매출을 세계 설계시장의 규모로 고려함.

-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유럽시장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6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중동시장도 전년 대비 3.7% 증가한 101억 달러를 기록
- 반면, 아시아시장의 매출은 중국과 호주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0.9% 하락했으며, 아프리카시장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1.6% 하락한 51억 달러를 기록
-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미시장도 에너지 부문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1% 하락해 16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중남미시장은 8.2%나 감소한 56억 달러를 기록
- 공종별로 살펴보면, 산업(Industrial), 환경 및 발전 부문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건축 및 교통 부문의 상승세가 크게 나타남.
 - 2012년 기준으로 74억 달러를 기록했던 산업 부문의 해외 매출은 44.5%나 감소한 41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상·하수도 및 폐기물 등의 환경 부문도 전년 대비 5.3% 하락한 78억 달러를 기록
 - 반면, 건축과 교통 부문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6.6%와 6.3% 증가한 110억 달러와 122억 달러를 기록

<지역별 해외 매출 추이>



<공종별 해외 매출 추이>



■ 우리나라 설계기업 12개 사 포함, 225대 기업 전체 해외 매출의 1.4% 점유

- 2013년도 세계 225대 설계기업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설계기업은 현대엔지니어링(33위), 한국전력기술(73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119위) 등 총 12개 사임.
 - 12개 사의 해외 매출 규모는 10.2억 달러로, 225대 기업 전체 해외 매출의 1.4% 수준임.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9. 2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영구 임대주택 단지 현장 방문 등
9. 3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자문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 - 안전 산업 육성 방안 및 세부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국토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미래국토포럼’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9. 5	한국노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제도개선포럼 총괄 분과 3차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주제 발표자로 참여 - 발표 주제 : 사회보험 사각 지대 현황 및 해소 방안

■ 최근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사업 리스크 관리 역량 현황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건설기업들의 대규모 해외 사업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2013년 해외건설에서 경험한 손실을 교훈으로 삼아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조기 경보 기능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 국내 건설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의 수준과 운영 범위는 다양하지만, 글로벌 건설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리스크관리 체계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음. - 본고에서는 해외 사업 리스크 관리 체계의 글로벌 표준화를 재고찰하고,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사업 리스크 관리 역량을 조사함으로써 기업들의 현황 및 시사점을 제시함. 이는 향후 국내 건설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건설기업들의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역량을 조직/절차/시스템, 수주 단계, 수행 단계 영역에서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 건설기업들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함. - 국내 건설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조직/절차/시스템은 실제 사업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수주 단계의 리스크 식별 및 평가에 집중돼 평가 후 분석, 대응 후 평가 등 사후 관리를 위한 리스크 추적과 변화 관리를 위한 기능이 절실히 필요함. - 특히, 실무자의 경험적·주관적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정량적 리스크 평가가 어려움. 이는 최근 정량적 리스크 평가에 대한 발주 요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속히 보완해야 할 기업들의 선결 과제임.

■ 「민간투자사업(BTO/BTL) 추진 일반 과정」 개설

- 일정 : 2014년 9월 23일(화)~25일(목)
- 장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9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대상 : 건설기업 SOC 민자사업 담당자, 정부·정부투자기관·지자체 민자사업 추진 실무 담당자, 설계·컨설팅 등 민자사업 관련 업체 및 금융기관 관련 사업 담당자
- 비용 : 45만원/인 ※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의 재직자일 경우 일부 환급
- 문의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Tel.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디지털 시대의 생존 전략

점점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게임을 하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음악을 듣는 것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스마트한 세상으로의 진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에 PC 보급으로 시작된 디지털 혁명은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숨가쁘고 복잡해 보인다. 자연스럽게 이에 적응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하는 그룹이 생겨났다. 요즘 세대 격차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소위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의 구분이 그것이다. 디지털 세대는 너무 이 세계에 빠져드는 반면, 아날로그 세대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꾸만 멀어지려는 경향을 보인다.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부머들은 아날로그 세상에서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끈 주역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디지털 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환경을 맞고 있다. 이들에겐 당장 새로운 사회적 소통과 일자리 찾기가 요구된다. 디지털 도구들이 상당 부분 이를 가능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구촌 사람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아날로그 세상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감성을 디지털 도구에 잘 접목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슈머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디지털 시대의 문화에 잘 적응하는가이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는 아날로그 시대의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자의 시대는 시장이 주역이었지만 후자의 시대는 네트워크가 주역이다. 시장은 소유와 경쟁을 중시하는 반면, 네트워크는 공유와 협력을 더 많이 요구한다. 요즘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공유와 협력의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들은 무엇을 소유하기보다는 그것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참여하고 체험하는데 익숙하다. 심지어 이들 세대는 주택이나 부동산마저도 소유와 투자의 대상으로 보다는 빌려 쓰고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시장 중심의 산업시대를 거쳐온 아날로그 세대는 이러한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내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남과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여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 이제 디지털 환경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안내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남과 더불어 더 많이 참여하고 공유하면서 나누는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건설경제, 2014. 8. 11>

윤영선(연구위원 · ysyoon@cerik.re.kr)